

## [보도자료] 쿠팡, 제도 악용한 민주노총의 '기업 괴롭힘' 주장에 정면 반박

2021. 11. 9.

- 민주노총 간부,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책에 대해 '직장 내 괴롭힘'으로 신고하고 5개월 유급휴가까지 요구
- 민주노총, 괴롭힘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하라고 요구
- 쿠팡, 노조 무리한 추가 요구에 반박 입장 공문으로 회신

2021. 11. 9. 서울 -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.

쿠팡은 금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“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”고 강조했다.

쿠팡은 이 공문을 통해 “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”면서 “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”는 뜻을 분명히 했다.

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.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“쿠키런 활동(노조 활동)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” 등의 언급을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. 또한 “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”, “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”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.

노동청은 이에 대해 “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”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.

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.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, 회사 측의 공개 사과,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,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.

쿠팡은 또한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. 쿠팡은 “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”을 재차 당부하며,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쿠팡 관계자는 “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'직장 내 괴롭힘 법'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”며 “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또 “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”며 “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